

박형준 / 5월 / 기출GS / 3회									응시인원
수강번호	문제 1	문제 2	문제 3	문제 4	문항 총점	석차	상위%	가독성 평점	
517297	17	11	18	12	58	1	2.78%	7	36
519711	17.5	11	17	10.5	56	2	5.56%	5	
517156	17	10.5	17	10	54.5	3	8.33%	5	
517310	16.5	11	16.5	9	53	4	11.11%	4	
517286	17.5	11.5	16	8	53	4	11.11%	4	
517197	15.5	9.5	15.5	11.5	52	6	16.67%	4	
517234	13.5	9.5	17	11.5	51.5	7	19.44%	5	
517718	15	10	17.5	9	51.5	7	19.44%	4	
519124	16	10.5	18	7	51.5	7	19.44%	5	
520904	16.5	10	15	10	51.5	7	19.44%	4	
523464	16.5	11	15.5	8	51	11	30.56%	4	
517145	15	10	17	8.5	50.5	12	33.33%	6	
517346	16	9.5	15.5	9	50	13	36.11%	4	
518218	16	11	17	6	50	13	36.11%	4	
519343	16	10.5	16.5	7	50	13	36.11%	5	
517200	16.5	9	16.5	7.5	49.5	16	44.44%	4	
517546	15	9	17	8.5	49.5	16	44.44%	4	
518073	15.5	9.5	16.5	8	49.5	16	44.44%	5	
519433	14.5	10.5	13.5	11	49.5	16	44.44%	4	
520102	16	9	14.5	10	49.5	16	44.44%	5	
517168	13	10.5	15.5	10	49	21	58.33%	4	
517425	16	7.5	16.5	9	49	21	58.33%	6	
514504	14.5	11	17	6	48.5	23	63.89%	5	
518044	15.5	10	15	8	48.5	23	63.89%	4	
518165	15.5	10	17	6	48.5	23	63.89%	4	
515018	15.5	11	14.5	7	48	26	72.22%	5	
519894	15	9.5	16	7.5	48	26	72.22%	4	
517303	13	10.5	16.5	7.5	47.5	28	77.78%	5	
518954	16	10.5	15	6	47.5	28	77.78%	5	
518764	16	9	16	6.5	47.5	28	77.78%	4	
519928	15.5	9.5	14.5	7.5	47	31	86.11%	4	
518198	13	10.5	16.5	6.5	46.5	32	88.89%	4	
518227	15	10.5	15.5	3.5	44.5	33	91.67%	4	
519409	15	7.5	16	4.5	43	34	94.44%	5	
517215	15	10	14.5	1.5	41	35	97.22%	4	
521841	7.5	6.5	10.5	4	28.5	36	100.00%	2	

박형준/4월/기출GS/3회/1번	채점자
	조현준
<p>1. 전반적인 총평</p> <p>전반적으로 판례형 문제였습니다.</p> <p>어렵지 않은 판례들이었고 중요한 판례들이었으므로 대부분의 답안이 주된 판례는 적당히 잘 적어주었습니다.</p> <p>다만 쉬운 논점이기에 판례를 현출도 높게 잘 적어주는 것이 중요하고 , 논리적으로 잘 쌓아서 사안 포섭까지 잘 가져가야 남들에 뒤쳐지지 않게 좋은 점수 받을 수 있을 것 입니다.</p> <p>2. 설문별 채점평 및 주의할 점</p> <p>(1) 설문 1</p> <p>소설문 1의 경우 답안 형식이 애매해서 고민했을 것 같습니다. 적당히 을의 항변이 될 수 있는 것을 고민해보고 판례랑 사안포섭 잘 해주면 됩니다.</p> <p>소설문 2의 경우 쉬운 판례였고 다들 잘 적어주셨습니다. 전합 판례의 경우 종래 판례와 바뀐 태도까지 적어주면 좋은 점수 얻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p> <p>(2) 설문 2</p> <p>역시 쉬운 판례이고 중요한 판례이기에 다들 잘 적어주셨습니다.</p> <p>다만 진보성의 경우 종래판례와 전합판례 잘 적어주고 바뀐 판례의 태도 적어주는 경우 검토도 간단히 적고 사안의 해결에서 잘 풀어나가면 좋은 인상 얻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p> <p>또한 전합판례 논거를 위해 선결적 논점으로 권확의 의의 취지 및 목적 관련된 판례 까지 앞에 적어주면 좋을 것 같고 전반적으로 판례 잘 쌓아서 논리적으로 잘 만들어 나가야 좋은 점수 얻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p>	

(3) 설문 3

판례의 핵심적인 부분은 다들 잘 적어줬으나 다소 아쉬운 부분이 많았습니다.

선결적 논점으로 심취소 의의 및 취지 적어주고 심결전치주의 적어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또한 판례에서 금반언 또는 신의칙에 반하지 않는다는 내용이나 예측 불가능 손해 없다는 내용까지 현출도 있게 잘 적어주신 답안이 거의 없었습니다.

3. 소결

이러한 판례형 문제의 경우에는 다각적 조치를 통해서 점수를 끌어낼 수 없고 판례 및 사안 포섭 이외에 적어줄게 많지 않아서 답안을 어떻게 구성해야 하나 고민이 많이 될 것 같습니다.

우선 종래 판례와 다른 전합 판례가 있는 경우 종래의 태도와 전합 판례 적어주고 태도가 바뀐 이유에 대한 검토 잘 적어주면 좋습니다.

그리고 판례부터 사안 포섭까지 논리적으로 잘 끌어와 주고 판례의 내용을 사안포섭에 잘 녹여내는 것이 고득점 포인트가 될 것 같습니다.

박형준/4월/기출GS/3회/2번	채점자
	조현준
<p>1. 전반적인 총평</p> <p>중요한 판례이기 때문에 다들 어렵지 않게 잘 적어주었습니다. 다만 완성도 있는 깔끔한 답안은 많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p> <p>2. 설문별 채점평 및 주의할 점</p> <p>(1) 설문 1</p> <p>간접침해 물어보는 문제였고 간접침해의 전용품 관련하여 기본적인 일반론 및 판례 다들 잘 적어주셨습니다. 그에 따라서 사안 포섭까지 풍부하게 대부분 잘 해주셔서 좋았습니다.</p> <p>다만 우선 문제에서 을의 항변 내용과 관련된 부분 캐치하여 그에 관련된 판례 적어준 분은 많지 않았습니다.</p> <p>문제에서 트리거가 주어진 경우 맞는 판례 잘 적어주는 게 좋습니다. 이 문제의 경우 ‘로만 나타난다.’ 고 주어졌고 이에 맞는 판례가 있기 때문에 이 부분 캐치 못한다면 좋은 점수 얻기는 힘들지 않을까 싶습니다.</p> <p>전용품에서 부가 관련된 판례 적어준 분이 많았습니다만 어쨌든 M의 부가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관련 있다고도 볼 수 있으나 문제에서 트리거로 주어진 부분은 아니었기에 적당히 짧게 적어주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p> <p>또한 간접침해 이유로 권확 관련 논점 적어준 분도 꽤 있었습니다만 역시 문제에서 문제되는 부분은 아니었기에 적당히 짧게 적어주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p> <p>기본적인 판례와 문제에서 트리거에 집중하여 판례 잘 적어주고 판례 관련내용 사안 포섭에 잘 녹여내어 풍부하게 적어주는 것이 좋은 답안이라 생각합니다.</p>	

(2) 설문 2

중요한 판례기에 다들 잘 적어주셨습니다. 문제에서 단순히 침해라고만 적어놨기에 간접침해여부까지 검토해주는 것이 좋습니다.

3. 소결

판례를 그저 암기에만 급급하지 말고 상황에 대한 이해와 왜 그런 판례가 나왔는지에 대해 조금 고민해보셨으면 합니다. 판례집을 사서 한 번쯤 읽어보는 것도 추천합니다.

박형준/4월/기출GS/3회/3번	채점자
	조현준
<div data-bbox="204 472 454 510" data-label="Section-Header"> <h2>1. 전반적인 총평</h2> </div> <div data-bbox="204 568 1390 651" data-label="Text"> <p>전반적으로 조문 및 판례에 대한 문제였고 난이도가 높은 문제가 아니라 생각됩니다. 많은 답안이 적혀야 할 판례 적당히 잘 적혀 있었습니다.</p> </div> <div data-bbox="204 710 1390 792" data-label="Text"> <p>문제가 이렇게 점수가 세세히 쪼개져 있는 경우 분량조절이 필요하고 또한 문제별로 적어줘야 할 판례 빠트리지 않고 잘 적어주는 것이 중요합니다.</p> </div> <div data-bbox="204 898 660 936" data-label="Section-Header"> <h2>2. 설문별 채점평 및 주의할 점</h2> </div> <div data-bbox="236 996 400 1034" data-label="Section-Header"> <h3>(1) 설문 1</h3> </div> <div data-bbox="204 1093 1390 1176" data-label="Text"> <p>공유 관련된 어려운 판례 아니었습니다. 판례에서 특허의 공유관계를 민법상 공유로 보는 논거들 여러 개 잘 나열하여 판례 현출도 있게 적어주면 됩니다.</p> </div> <div data-bbox="236 1236 400 1274" data-label="Section-Header"> <h3>(2) 설문 2</h3> </div> <div data-bbox="204 1332 1390 1507" data-label="Text"> <p>소설문 1의 경우 역시 판례에서 주어진 논거 잘 외워서 빠트리지 않고 적어주셨어야 합니다. 판례가 길어서인지 암기가 부족한 분들이 꽤나 보였습니다. 판례의 논거 중 하나로 특허법 99조 2항, 4항 나열하고 있기 때문에 선결적 논점으로 특허법 99조 의의 및 취지 적어주셨어야 합니다.</p> </div> <div data-bbox="204 1565 1390 1648" data-label="Text"> <p>소설문 2의 경우 적당히 현금 분할 가부에 대한 판례, 대금 분할 가부에 대한 판례 잘 적어주고 사안의 해결 잘 적어주셨으면 됩니다.</p> </div> <div data-bbox="236 1709 400 1747" data-label="Section-Header"> <h3>(3) 설문 3</h3> </div> <div data-bbox="236 1805 1378 1843" data-label="Text"> <p>소설문 1의 경우 조문과 사안의 해결 적당히 잘 적어주면 되고 틀린 분 없었습니다.</p> </div> <div data-bbox="204 1901 1390 1984" data-label="Text"> <p>소설문 2의 경우 중요한 판례기 때문에 대부분의 분들이 적당히 적어주셨으나 판례 암기가 부족한 분들이 많았습니다.</p> </div>	

이러한 판례형 문제의 경우 판례와 선결적 논점 한두 개 이외에 딱히 적어줄 것이 없으므로 판례 암기가 고득점을 나누는 기준이 됩니다. 넘버링 활용해서 판례의 논거들 잘 적어줘야 점수 충분히 들어갑니다. 또한 학설 간단히 검토해주면 좋고 사안의 해결 적당히 해주면 됩니다.

아직 4월 이므로 판례 현출도 낮은 부분 이해합니다. 7월까지 판례 열심히 외우시길 바라겠습니다.

3. 소결

이렇게 문제가 점수가 세세히 쪼개져 있고 거기다 판례형 문제의 경우에는 딱히 다각적 조치 등을 해줄게 없기 때문에 고득점 포인트가 많지 않습니다.

아무래도 적을게 많지 않아서 채점하는 사람 입장에서 판례를 얼마나 키워드별로 꼼꼼히 외웠나를 보게 되는 것 같습니다. 판례가 길기 때문에 키워드 별로 논거 놓치지 않고 잘 적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p>박형준/4월/기출GS/3회/4번</p>	<p>채점자</p>
	<p>조현준</p>
<p>1. 전반적인 총평</p> <p>앞 문제들이 크게 어려운 문제나 다각적 조치가 필요한 문제가 없었고, 또한 판례들이 지엽적인 부분 없이 모두 중요한 문제들이었기에 문제 4번까지 시간 분배 면에서 크게 어렵지 않았을 것 같습니다.</p> <p>다만 마지막 문제가 조치를 고민해야 할 문제이고 잘 안 외우는 판례들이 몇 개 있어서인지 잘 쓴 분들이 많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p> <p>2. 설문별 채점평 및 주의할 점</p> <p>(1) 설문 1</p> <p>소설문 1의 경우 조문 33조 적어주고 승계인 판단해주면 되는 문제였습니다.</p> <p>문제에서 ‘강제집행 면탈 목적’ 이라는 키워드가 주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이 부분 놓친 분들이 많았습니다. 문제를 풀기 전에 문제부터 꼼꼼히 읽어보셨으면 합니다.</p> <p>소설문 2의 경우 판례가 조금 어려운 부분이었을 수도 있고 잘 안 외우는 판례일지도 모르겠습니다만 변리사 시험을 준비하는 입장에서 민사법상 채권자 대위권, 채권자 취소권을 한 번쯤은 생각해보셨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p> <p>몇 회였는지 기억이 안 납니다만 아예 민사법상 지식으로 풀어야하는 지엽적인 논점이 기출된 적이 있으므로 ‘변리사’ 수험생으로서 최대한 아는 지식 동원해서 풀어내야 합니다. 또한 문제에서 을이 ‘채권자’ 라는 키워드가 주어졌으므로 키워드 잘 캐치해주시길 바랍니다.</p> <p>(2) 설문 2</p> <p>문제에서 ‘단순히 알고 있는’ 이라는 키워드가 주어졌으므로 이중 양도 적극 가담 판례 나와야 합니다. 이 부분 판례 잘 적고 사안의 해결 적어주셨으면 됩니다.</p>	

(3) 설문 3

이제는 익숙한 조치문제입니다.

앞에서 설문 1과 2 잘 풀어주셨으면 설문 3에서 가능한 조치 생각하기 어렵지 않으리라 생각합니다. 마지막 까지 시간 분배 잘 하셔서 설문 3에서 다각적으로 가능한 조치 다 적어주시면 좋은 점수 들어갑니다.

3. 소결

일반적으로 앞에서 어려운 문제가 나오고 마지막 4번 문제에서 좀 쉽게 나와 시간 분배에 어느 정도 성공하도록 기출 됩니다만 이번 3회처럼 마지막 4번 문제에서 뒤통수 치는 경우가 있습니다. 따라서 36/24/36/24 잘 지키셔서 시간분배에 최대한 충실하도록 노력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기출GS의 목적인 난해한 문제에 대한 접근과 그에 따른 시간 분배 충분히 잘 연습하고 계실 것 같습니다. 2주차 까지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남은 2주도 파이팅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문제 1]

I-1. 서문 (1)-1)

1. 당면무효 관련 취사시

무효심판 절차 이외에서 특허의 당면 무효를 주장할 수 없다.

2. 권리변위 부정 취사시

특허에 변경 무효사유가 있을 경우 권리변위가 부정된다고
하나, 진정성 부정되는 경우에는 부정할 수 있다고 한다.

3. 권리실흔 항변 취사시

특허가 무효사유 있을 경우 무효로 될 것이 명백하다면
무효심판 행정 절차라고 고려한 권리에 가하여 항변하지
청구. 동해배상청구는 ~~권리실흔으로서 허용되지 않는다.~~

4. Z 항변 성격

① 당면무효 항변은 허용되지 않는다. ② 특허 진정성 부정 시
에도 권리변위 부정 항변 불가하다. ③ 진정성 부정 시 권리
실흔 항변은 가능하다. ④ 따라서, Z 항변은 권리실흔 항변이다.

I-2. 서문 (1)-2)

1. 의견

특정 Z 항변을 판단하기 위한 전제로서 친제(공동 발명)
이 특허발명 진정성을 심리 판단할 수 있는지
문제된다. 특허청과 권리실흔에 관하여 1984
대판이 있다.

2. 동태 취사예

진보성 ~~상대~~ 증명되어도 권리범위가 부정확하다고 하다가
권리범용 항변이 가능하다고 한 바 있다.

3. 전항 취사예

① 특허가 무효로 된 것이 영행한 경우. 그에 대한 권리
행사도 권리범용이고. ② 침해소송 법원으로서도 ~~고소~~
권리범용 항변이 있는 경우. 그 항변을 살피기 위한 전제
로서 특허 진보성을 신리 판단할 수 있다.

4. 비판

특허청과의 권한 분배. 진보성 판단이 고소의 판단이
요구되는 점에 관한 비판이 있었다.

5. 결론

특허의 대세적 무효를 바가지 앓는 자에게도 무효선판을 청
하게 하는 것이 될 수 있으므로 진보성을 신리 판단
하여 권리범용 항변 허용하는 전항 취사예를 타당하다.

6. 사항 3의 권리범용 항변 양분 판단의 전제

① 법원은 특허법명 진보성 여부를 심사할 수 있고 ② 이에
근거하여 항구를 기각할 수 있다.

3차

II. 설문(2)

1. 전제 - 혁신의 이익

침해소송 계속 중에 제기된 소극적 권리범위혁신선판
조 관련한 기능을 갖는바. 혁신의 이익이 있다.



2. 신규성 부정되는 경우

(1) 권리범위 부정 여부 제1항

권리범위확인심판에서 특허발명이 출원 당시 공지공용인 경우 무효심판 결정 전이라든 그 권리범위를 인정할 수 없다고 한다.

(2) 사안

① X 발명의 신규성이 부정되는 경우, X 발명의 권리범위는 부정할 수 있고, ② 심판원은 가각심결하여야 한다.

3. 진보성 부정되는 경우

강령이 많기
정성

(1) 권리범위 부정 여부 제1항

특허발명의 진보성이 부정되는 경우까지도 권리범위가 부정되는 것은 아니라고 한다.

(2) 권리범위확인심판에서 진보성 심리가부 제1항

1) 특허 무효 권리범위확인심판 목적 달성

① 특허는 일한 등록이 되면 무효심결에서 무효로 결정 되기 전까지는 일단 유효한 것이고, 다른 절차에서 강변 무효라고 할 수 없다. ② 권리범위확인심판은 특허발명과 대비하여 불 특허발명 조목이 미치는 범위를 객관적으로 인정하여 분쟁을 조목리 공개 예방하는 목적을 가진다. ③ 따라서, 권리범위확인심판에서 특허 진보성을 심리 판단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변론자료

2) 특허법상 심판조 및 무효심판 기능 약화 문제

① 특허법에서는 특허 무효 사유 있는 경우, 무효심판 절차를 이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② 권리행위 중인 심판에서 특허 무효사유를 진정하게 신리하는 것은 무효심판 절차의 기능 약화될 우려가 있다. ③ 따라서, 권리 행위의 부정에 관한 변론 특허 진보성이 부정되는 경우까지 확장할 수 없다.

(가) 권리 효력 사인

공정행위의 관계상, 특허행위의 진보성을 신리. 판단 할 수 없다고 한 것이다.

(나) 심판원 조치

① 따라서, 심판원은 진보성 부정 여부에 대하여 신리할 수 있고 ② 변론을 행하여야 한다.

재판부에서.

5.8

II. 심문(3)

1. 문제점

심판절차에서 주장하지 않았던 공격방어방법을 선택 청구항등에서 제출할 수 없는지. 선택지항등의 신리 범위에 관하여 문제된다.

2. 확설

(1) 제한설

제한설로, 선택지항등은 권리항등이고, 선택지항등의 신



심판에서 제정하지 않았던 사항을 심판제12동에 이르기 제정하는 것은 허용하지 않는다.

(2) 무제한성

심판제12동의 1항상 1항인바, 심판에서 정권립자국이 적용됨으로, 12동에서 마찬가지로 심판에서 제정하지 않았던 사항 제정할 수 있다고 한다.

3. 취지

① 심판제12동의 12동이 심판의 위법성 일반성을 근거로 무제한성을 원칙으로 하되, 당사자 적자인 부당한 문제가 생길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일부 제한한다.

② 심판에서 적용하지 않았던 규정을 심판제12동에 하더라도 실질적 지배관계에 반한다고 할 수 없다.

심판의 이익이나 당사자에게 미칠 수 있는 손해 등을 가치는 것이 아니라고 한다.

4. 결론

① 심판제12동의 소용물, 선판·심판 절차 기술상 관련 제도를 고려할 때 무제한성을 원칙으로 하되.

② 이견 제출 통지는 강행규정인 전, 심판제12동에서는 출원서류, 정정청구서 등의 보정이 허용되지 않으므로 심리범위를 일부 제한하는 취지의 타당성을 밝힌다.

5. 사안

- ① 2층 집판절차에서 심리·판단된 위법사유에 한하지 않고
 ② 심리를 위법하게 하는 사유를 심판치222등에서 새로이
 주장·입증할 수 있다. ③ 법원으로 이러한 상황에 대하여
 심리·판단할 수 있다.

[문제 2]

I. 선택(1)

1. 간접침해 의미. 취지·法 제127조

특허는 무제재산권으로 침해 방법이 여러가지가 있는데, 직접침해 제1항
 이 높은 정도 행위를 침해로 간주한다.

2. 물건발명의 경우·法 제127조

① 물건의 생산에만 사용하는 물건을 임의로 실시해야 한다.

② 공공성, 전문성을 갖추어야 한다.

3. 특허물건의 "생산"에 이용되는 물건 - 공공성

(1) 생산의 의미 제127조

① 간접침해 제2조는 구성 일부를 드러한 물건을 사용하면
 그러므로 구성 전부를 갖춘 물건을 실시할 개연성이 클 경우
 침해로 간주하리라고 특허권 권리가 무효하게 취급
 되지 않는 것이기 하여 ② 구성요소 일부를 드러한
 물건을 사용하여 구성 요소를 갖춘 물건을 만들어
 이를 모두 행위를 할 수 있다.

(2) 이용침해 관련 제191

특허발명인 특정 물건의 생산에 사용되는 경우만 아니라 이에 다른 부품이 결합하여 다른 효과를 나타내거나 기능침해 성립에 자량이 있다

4. 특허권인 생산 "예만" 사용하는 물건 - 전용성

(1) 전용성 판가기준 제191

① 물건이 다른 용도가 있다고 하더라도 주요한 사용 용도에 상응하여 생산될 수 있는 경제자·상업자 내지 실용적인 다른 용도가 있어야 하고 ② 이러한 사용 가능성, 일시적인 사용 가능성만으로는 다른 용도가 있다고 할 수 없다.

(2) 특정 구매자 사용 제191

특정 구매자가 해당 물건을 구입하여 사용하는 과정에서 특허발명인 구성이 모두 안배된다면, 특허발명인 생산 예만 사용하는 물건을 보아야 한다고 한 바 있다.

5. 사안

(1) 공용성

① $A+M+C$ 에 반조체 제조업체가 이르는 사용하여 $A+M+b+C$ 로 나타나고, ② $A+M+b+C$ 는 $A+b+C$ 를 그대로 포함하고 M 을 추가한 것으로 $A+b+C$ 의 일체성이 유지되고 있다고 판단된다.

③ 또한, b 는 B 로 실시하게 될 개연성이 크므로 B 와 실질적으로 동일하다. ④ 따라서 $A+M+C$ 는 $A+B+C$

미세한 디자인 ③ 국내에서 주권 주장은 갖출 반제품이 생산되고
 이 것이 하나의 주체에게 주권되어 마지막 단계의 가공 공정이
 이 예정되어 있으며, 이 그러한 가공 공정이 우리 사회하거나
 간헐하여 그 반제품의 생산만으로 특허법상의 유효성으로
 결정한 알제르스의 도안은 나라별이면, 예외적으로 국내에서
 특허법으로 생산한 것으로 보는 것이 특허권의 실효적
 보호에 부합한다.

(2) 사안

제 3자 丁이 제 3자에서 반제품 생산한 바, 이 경우 충족한다.

① 반제품이 주권 주장을 모두 갖추었다면 이 경우 성립하고
 이 그 결함이 우리 사회하거나 간헐하면 이 경우 성립
 하므로, 이 경우 국내 생산 간주하여 특허의 직접침해
 해당한다.

3. 간접침해 여부

반제품에 사용된 도안은 사정이 있어, 간접침해가 아니라고
 판단된다.

2.5

주요
이유...

[문제 3]

I. 설문(1)

1. 문제점

특허 공시의 성질에 관한 규정이 없어 문제된다.

2. 해결

18

① 특허법 표현은 근거로 한 공익성 ② 합유나 유사한 성질이 있어 합유성이 있다

3. 제19조

① 제9조 제 99조 2항. 4항 범위 내에서는 합유나 유사한 성질을 가지거나 또는 무체재산권 특수성에서 유래한 것으로 보인다. ② 일반적으로 특허권 공유자들이 ~~특허공유자~~ 공유 특허권에 대하여 조합관계로 소유한다고 볼 수도 있으므로. ③ 특허법 다른 규정이나 특허의 본질에 반한다는 것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민법 공유에 관한 규정이 적용된다고 하여. 원칙적 공유성이 판상이다.

4. 검토

특허권이 무체재산권인 점 등을 고려할 때 원칙적으로 공유 관계로 파악함이 타당하다.

II-1. 설문 (2)-1)

1. 제9조 제 99조 2항. 4항 의미 취지

① 타 공유자 모두의 동의를 받지 않는 한, 지분을 이전하거나 증여하거나 상속하거나 처분하는 행위를 할 수 없다.

② 제3자가 투입하는 자본이나 기술력 등에 의해 타 공유자 지분의 경제적 가치는 큰 영향을 미치는 특허권 공유 관계의 특수성에 따른 것이라 한다. (제19조)

2. 공유를 분할 청구 인정 여부 판례 - 적극

특허권 공유자 사이에 이해관계가 대립되는 경우,
그 이해관계를 해소하기 위한 수단으로 민법상 공유
분할 청구를 인정하더라도 ~~민법 제 99조 2항, 4항의 반의~~
~~에 반하지 않고, 또한 민법상 공~~ 분할 청구를 금지
하고 있는 특허법상 규정도 있으므로 ~~민법상~~
~~공유를 분할 청구에 관한 규정을 적용할 수 있다고 한다.~~

3. 공유특허권에 대한 분할청구권도 인정된다고 한다.

3. 민법상 공유를 분할 청구에 관한 규정 적용 여부 판례

(1) 공유의 특허공유 성질

전술한 바와 같이, 특허권 공유에는 민법 공유에 관한
규정이 적용된다고 하여 원칙적 공유성이다.

(2) 민법상 공유를 분할 청구 규정 적용 여부

특허권 공유에서 분할 청구 인정하더라도 특허법 규정
에 반하지 아니하고, 이를 금지하는 특허법상 규정
도 없으므로, 따라서 민법상 공유를 분할 청구에 관한
규정이 적용된다고 한다.

(가) 결론

특허권 공유를 원칙적으로 공유로 보는 한, 민법상
공유를 분할 청구 규정도 적용된다고 볼 수 있다.

II-2. 설문 (2)-2).

1. 현물분할 허용 여부 [제19]

특허권을 여러 사람에게 분할하게 되면 사실상 내용이 동일한 복수의 특허를 발생시키는 바, 그러한 방식의 현물분할은 허용되지 않는다.

2. 대금분할 가부 [제19]

현물분할 방식으로 허용되지 않는 바, 경우에 등에 의한 대금분할도 허용된다. 경우에 등에 의해 대금분할된 경우, 그 청구 전에 특허법령을 위반하고 있던 공표자에게는 부정당사권이 인정된다. (법 제122조).

3. 결론.

① 특허권이 현물분할을 통해 특허를 발생시키는 바, 특허권이 상충성 허용되지 않는다. ② 경우에 등에 의한 대금분할도 가능하다. ③ 현물분할은 가족배상에 의한 현물분할도 중복 특허 문제가 없으므로 허용된다.

III-1. 설문 (3)-1).

1 무효심판 피청구의 자격

(1) 공표 이후 필수적 공증심판 피청구인 - 법 제139조 2호

공유인 특허권자에게 대하여 심판 청구하는 경우, 공표자 모두는 피청구인으로 하여야 한다.

(2) 사망

28

丁이 공유 특허권자 甲. Z에 대하여 청구한 것이므로
甲. Z를 모두 피청구인으로 하여야 한다.

2. 저속까지 권리범위확대입장 청구인 373

(1) ~~표준~~까지 공중실행 청구인 - 법 제 139조 3항

공유인 특허권자가 실행 청구하는 경우, 공유자 모두가
함께 청구하여야 한다.

(2) 사안

특허권을 공유하는 甲. Z이 실행 청구한 바, 甲. Z이 함께
실행 청구하여야 한다.

III-2. 선행 (31-2)

1. 각 당사자의 지위

甲. Z은 각각 실행의 당사자이다.

2. 문제점

특허법은 실행 청구에 관하여도 ~~표준~~까지 공중실행 청구 규정
(법 제 139조 3항)을 두고 있으나, 실행제외의 경우에 관
하여도 규정이 없다. 따라서 이 경우, 공유 특허권자가
제각각 단독이 ~~표준~~까지 공중실행인지 문제된다.

3. 해결

① ~~표준~~까지 공중실행과 ② ~~표준~~까지 ~~표준~~까지 공중실행이 있다

4. 제 191

(1) ~~표준~~

상표법 관련 사건에서, 특허의 권리 행사를 방해하거나

권리 유지를 방해하는 불리한 입장이 있을 때, 공유자를
 1인으로 그 방해배제를 위하여 단독으로 심판청구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고 하여, 유사필수적 공동소송인의
 입장이다.

(2) 논거

① 공유자 중 1인이 승소하더라도 심판청구(23)에 선행
 절차가 재개되고, 패소하더라도 심판이 그대로
 확정되는 바, 합일확정에 반하지 아니하고 ② 공유자
 중 1인이 소 제기에 충족하지 않으면 불리한 심판
 이 그대로 확정되는 불합리한 결과가 발생한다고 한다.

h. 검토

보존행위는 1인이 단독으로 할 수 있고 (민법 제 265조
 단서), 공동소송 강제하지 않으므로 합일확정에 반하지
 아니하므로, 유사필수적 공동소송인의 입장이 타당하다.

6. 사안

해당 심판청구등은 유사필수적 공동소송이므로, 甲. 乙 중 1인이
 단독으로 제기해도 적법하고, 함께 제기해도 적법하다. 즉
 단독으로 원고정부를 가진다.

(제1항) 끝이요!

[문제 4]

I-1. 설문(11-1).

1. 출원인 자격

① 정당한 권리자 반증 위하여 발명자 또는 승계인만이 출원인 자격이 인정되며, ②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는 발명자에게 원시적으로 귀속된다. (특정 제 33조 1항 본문)

2.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 이전 - 특정 제 33조 1항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는 재산권으로서 타인에게 이전 가능하다.

3. 권리 귀속 주체 판단

(1) 甲

甲이 X 발명을 완성한 바,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는 甲에게 원시적으로 귀속된다.

(2) A

甲은 강제징행 변할 목적으로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A에게 양도한 것이나, 이는 강행법규에 위반된 것이므로 무효이다. (민법 제 104조). ㄱ

4. A 특허 유예

A 특허는 특정 제 33조 1항 본문을 위반하므로 특허는 하자있다.

I-2. 설문(11-2).

1. 재권자 대위권 행사 - 민법 제 404조

① Z를 甲에게 피보전채권이 있고 ② 甲은 A에게

이전등록청구권이 있고, ③ 범주의 필요성 및 ④ 甲이 권리 행사한 바 없으므로 채권자 대위권을 행사할 수 있다.
 ⑤ A특허를 甲에게 귀속시킨 후, 이에 대해 강제 집행할 수 있다.

2. 채권자 취환권 행사 (민법 제406조)

甲이 A에게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양도하기 위한 행위는 강제집행 전항의 목적인 바, 사해행위는 아니므로 채권자 취환권 행사 후 이에 대해 집행한다.

3. 특허법상 조치 불가

乙은 특허권자 등이 아니어서 특허법상 조치 불가하다.

II. 선택(2)

1. 이중양도 문제

(1) 원칙

사적자치 원칙 상, 유효하다.

(2) 예외

이중양도를 잘 알면서 이에 적극가담한 것이라면 반차폐적 법률행위로서 무효라 한다.

2. 출원 전 승계 - 법 제382조

승계만으로 권리 발생하며 출원은 대항요건이다.

3. 甲 특허 유무

(1) 원칙

승계만으로 효력이 발생한다. 甲은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

※ 추가작성의 경우 []에 "계속"이라고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

가 있으므로, 특허는 유효하다.

(2) 예시

관공리 안 사원 내의 작곡가였던 경우, 양쪽은 무효이고, 특허도 무효이다.

III. 실용(17)

1. X발명 관련

(1) 하자

X발명은 객관적 증거이어서 하자 없다.

(2) 권리

① 특허는 D에게 영리변명 요구할 수 있다. ② 양쪽은 유효한 경우.

수험생 여러분의 합격을 기원합니다!

부당이익변명 요구할 수 있다. (민법 제141조)

2. Y발명 관련

(1) 하자

특허는 받을 수 있는 권리가 없으므로, D의 특허권도 실용증거가
없고 제 3자에게도 발명권 없다.

(2) 권리

1) 이전등록청구 - 법 제193조 제2

특수 정당한 이유로, 이전등록청구 가능하다.

2) 무효심판 청구

공공영익에 중하게 해를 끼친다면, 무효심판 청구할 수 있다.

정당한 이유로, 청구인 자격이 있다. (법 제193조 제1항)

3) 양쪽은 유효한 경우

양쪽은 유효한 경우, 변명청구할 수 있다. (민법 제141조)
※ 여기에 기재한 사항은 채점하지 않으나, 분리하거나 훼손하면 안됩니다.

※ 채점기준 및 모범답안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제5호에 의거 공개하지 않습니다.

4) 재판이전

이리까지도  **윌비스** 변리사학원 1544-3383 patent.willbes.net **3.5** 라이팅입니다!

[문제-1]

I 선택(1)

1 선택(1) - 피고 2 항변 성격

(1) 당연무효 항변(1주)

- ① 행정처분의 공행효상 부당사유 있는 경우 무효성을 확립한 것이므로
당연 무효하다 (4주) ② 진보성 부당 주장하며 당연무효 항변은
불가하다

(2) 권리항위 부당 항변(2주)

- ① 신생성위헌의 경우 권리항위 부당하나, 진보성 부당의 정황까지
한정해야 하는 것을 아이다 (4주) ② 진보성 부당 주장으로 권리
항위 부당하진 않다

(3) 권리남용 항변 (적극)

1) 4주

공익, 특허법 목적, 당사자행위, 실질적 이익을 논거로 부당사유가
형성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한 2주 기한 진보항변을
허치난용이다

2) 2주

2주 진보성 부당 주장하며 권리남용항변 가능하다

(4) 사유기능항변 (적극)

- ① 특허법 제 124조 제 1항 제 1호의 규정에 따라 공익기술라 할지라도 2주
부기 통치에 있어 2주 없는 경우 특허법 제 124조 제 1항 제 1호의 규정이
권리항위에 속하지 않는다 (4주) ② 2주 X 포섭한 상황



제2판에 하느바. 자기실시 X가 공리기술로부터 용이하다고
주장하여 2판 실시 가능하다. 문헌공개의 정무를 하느바리
이다

2 소의용 2)

(1) 2의 항변

권리남용 항변. 리용 실시 항변 가능하다

(2) 권리남용을 법원에서 권리판단 가부 (적극)

1) 사례

장사가 권리남용 항변을 하는 경우. 특허심판원을
그 권리가 있는 권리당 원하여서 권리판단 가능하다.

2) 사항

특허심판원을 2의 권리남용 항변이 원하던 항변권기
판단하여 권리당 권리판단 가능하다

(3) 야기 기하 기각 가부 (적극)

특허심판원, 특허심판원 청구하는 리체가 권리남용이라면
2의 권리남용 항변 받아들여 기각판결 가능하다

II 소의용 2)

1 소의용 권리남용 소의용 소의용 소의용 (135③)

불공정배상 또는 손해배상 위해 특허권이 권리남용 소의용 소의용
미리 공적 착수한 판관 (소의용은 제2판이다.)

2 신기술·진보성 부정이유로 권리범위 부정가복

(1) 사례

신기술 위반이유로 권리범위 부정리나. 이와 같은 법리는
권한성 위반의 경우까지 적용할 것을 아니라

(2) 검토

- ① 허가기술 이외 법리는 신중해야 하리라. 유사타당하다
- ② 단, 신기술·진보성 모두 구성요건 충족하는 바 차등을
두 이유가 없다는 태도로 존재한다

(3) 사항

신기술 위반이유로 권리범위 부정가능. 권한성 위반이유로
권리범위 부정 불가하다.

3 권리범위주인 심판에서 권한성 상이판결가복

(1) 문제제기

허용하는 권리 주체와 불허하는 권리 주체가 있다

(2) 권한 문제

권리범위 주인 심판은 권리행성 목적으로 고유한 기능을 가
고 일체성. 권리범위주인 심판에서 권한성 상이판결하면
대체효과 없이 권한분배원칙에 반하고 권리성판 기능약화
문제가 있으므로 권한성 상이판결 불가하다

(3) 검토

권한분배원칙, 권리성판 기능약화 문제와 권리범위 주인 심판
의 신기술 판결의 관련 목적 고려하면 권한문제가 타당하다

(4) 402

권리상 위배를 권리단언이 불가하다 ✓

4 상표위원의 조치

(1) 신규상 부심의 경우

권리범위가 부합된다면 권리범위가 속하지 않아 '인용상표'로
예상된다

(2) 권리상 부심의 경우

① 권리상 위배에 대해 권리단언 불가한 하에 같은 권리범위
부합을 상반해 볼 수 있다. ✓② 권리범위 다름으로 권리상 위배만 존재하는 경우, 각인의
이익이 있어 부합될 수 있다 (부합) ✓③ 권리범위 타동은 다름으로 부합된다면 각인의 이익이 있고
X의 권리범위가 속하므로 '기각상표'로 예상된다

III 12문(3)

1 상표특허소송의 의미 / 취지 (186)

특허법원에 제정된 상표특허 소송이다

2 상표법위

(1) 문해정

소송과도 관계없이 '상표권리자의 (186⑥)'가 적용되는 소관
에서 제기된 주장에 관해 판례가 문해된다 ✓

(2) 특허

① 무제한성 직권상고의. 변조취득을 논거로 한다

② 제2항 상고권리취득을 논거로 한다

(3) 사세

① 상고는 행정기관이고 상고취소소송은 행정소송으로 그 소장은 상고의 위법성 '원상'이라. 따라서 원판결으로 심판에서 주장한바 새로운 사유 소장에 보완소 제기가능하다. 즉, 원판결 무제한성 인정이다.

② 단. 항사과 직권 박탈라는 문제가 있을 경우 '제2항'이라

(4) 제2

① 재판받는 권리는 타심위법인 헌법에서 보장하는 권리 이므로(헌법 21조), 소등판결 이어서 '무제한성' 원칙이요

② 항사과 직권이 보장되지 않을 경우 '제2항'이라.

3 법원의 권리

무제한성 상고취소소송에서 항사과 직권 박탈문제에 관하여 제2항이 소등판결에서 새로운 주장 가능하다. 법원은 항사과 주장에 기해 판결한다 <결>

[문제-2]

10

I 문제

1 간접침해 의미/취미 (1개조)

직접침해 권침해이나 간접침해 제1항 높은 항위를 충족시킨
하 항위로 간주하는 제2항이다. 단, 간접침해는 특허된
부품 조립 권리 양은 한 번에 대해서만 인정된다(4대).

2 본인발명의 경우 (1개조1호)

2 본인의 생계에만 사용하는 물건을 생산. 양은 등하는
항위를 인정한다

3 권리범위 식인상판에서 간접침해 상지가부(적극)

(1) 원칙

① 부당성 간접침해는 권리범위 안에서 침해간주하는 것이므로
권리범위와 무관하다

② 양면 침해간주하는 이상 - 권리범위에 속한다

(2) 예외

간접침해 대상물이 아니라 개용제품은 식인상판 밖행위
하여 간접침해를 권리범위 식인상판에서 상지한다(4대)

(3) 정도

권리범위 지배력은 본인도 객관적 특성이 가능하고 분할
해방 및 3기 조립의 권리범위 식인상판 유지할 수 있다.

(4) 사안

간접침해로 소지한 권리범위 식인상판에서 상지한다



4. 권용성 요건

공용성라 권용성을 판촉해야 한다.

5. 공용성 판단

(1) 생상의 의미 (4대)

구성 및 특 고어인 용인들 구성 원배산 본변으로 판촉한 것
의미라하여 공용성 생상에 한하지 않고 가용.조성도 포함한다

(2) 구성부가 다른 우원인 효과 발휘되는 경우 (4대)

구성부가 다른 우원 효과 발휘되는 경우 구성원 생상에
영향이 없다

(3) 사안

$A+u+C$ 권마용 페르는 가용시 $A+u+b+C$ 가 되고
이는 甲의 $A+b+C$ 생상에 사용되는 물건이다

6. 권용성 판단

(1) 타용성 판단 (4대)

사리동형성 승인권수 외는 조제적, 용제적, 사용, 다른용이
있는 것을 요하느, 일원성, 이원성, 판촉, 사용가능성변인
타용성 없다

(2) 다른 용 사용 가능성 (4대)

다른 용으로 사용시 타용성이 없다는 주장하는 것은
배척된다.

(3) 사안

기존 이용공과 다른방법으로 사용 $A+u+C$ 는 배척된다

원래는 행태한 것을 배척한다. 가능성만을 떠올리게
 되고 실제 사항이 기술이용가능성으로만 사물로 원의
 때문이다

17 소관

2의 연가상 제라는 신종. 유용성 만족이냐 리용성이냐

사안판결 4

h~k

II 사안(2)

1 직접침해 여부

(1) 구성요건 전체 충족 (사안)

구성요건과 2 해당관계가 2개의 실시방법이 동일하여
 원의 양자면 구성요건 전체 충족이라 볼수있다

(2) 사안

① AER 회피성 변형품만을 직접침해 아니다

② 단, 예외적으로 변형품이 하기의 주제에게 수권되고
 위주에게 가용성예외성이 있고 그 가용성이 주제사도
 간단한 경우, 변형품으로 원제품 작용으로 주제가 볼
 하다면, 예외적으로 주제사상 안으로 보라(독려수권주제)

③ 위 경우에는 직접침해로 볼수 있다

2 간접침해 여부

(1) 간접침해 주지/제한 (사안)

① 간접침해 전제조건으로 직접침해 개연성 높은 행위를 소위
 2번이 후에 간접침해 특정 행위를 보지 않기 위험이다



② 단. 특허권 부당침해를 하지 않는 범위내 권한이다

(2) 121조 1조 생산 의미

특허권의 원배출 121조 1조의 생산은 국내생산을 의미
한다. 원배출이 국내에서 생산되었더라도 외국에서
원배출은 생산되었다면 간접침해 아니다

(3) 사안

제3국에서 J이 원제품 생산하다. 121조 1조의 생산이
아니라 간접침해 아니다

2. 부당한 타당여부 (복합)

① 원제품으로 직접침해는 아니다.

② 국내생산 아니므로 간접침해도 아니다.

③ 부당한 복합'하

✓ 2.8

<중>

[문제-3]

I 문제(1)

1 문제집

공유권의 발생행위가 문제집이다

2 함의

① 공유권 특허법 조항 근거로 한다

② 양유권 99 조항 취지는 근거로 한다

3 사례

99 조항은 무제한으로 특허에 대한 것이므로 특허권 공유라는 것이 본래의 조항 취지를 형성하여 논할 수 있어야 한다는 보충 필요
이유를 들어 본래는 발명의 구성은 일체로 특허법에서 다른
구성 요건 특허법 조항에 본래라는 특허권 사정이 일체로
원형상 공유 구성 적용한다

4 결론

원법 278조가 소위권이익의 대원칙에 원형상 공유 적용
한다 하므로 사례 타당하다

5 사안

특허권 공유의 법적 성질은 2.78 조항으로 본다

II 문제(2)

1 소수권(1)



II 원문(2)

I 소문(1)

(1) 99②④ 의의 / 취의

1) 의의

특수인 경우, 지원이한 권리 소멸 하거나 사후권 소멸 시
문제의 권리 발아야 한다

2) 취의 (사예)

특허권을 무효 개시권인바 타인의 권리에 등이 다른 경우
각각에 영향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이같은 특허권 소멸에
99②④와 같은 취의를 두고 있다

(2) 분할권구인 인정여부 및 민법 269조 적용 여부

1) 분할

특허법에 명문의 규정이 없다

2) 사예

① 공유나 사이에 이해관계가 인정되거나 특허법상 실시권
등은 개인적행사가 있을 수 있어 공유에게 사용권 필요
성이 있다. ② 공유로 분할권구인 인정여부 특허법 상권구
이나, 법원에 맡겨지는 사항이 없다. ③ 공유로 분할
권구 인정한다

2) 검토

민법 269조 준용하고, 이는 인정여부 99②④의 취의
범위 안에는 없다. 특히 타당하다

4) 사2

특정 2사2로 분할가능하다. /

2 사2 (2)

1) 현물변의 가부

1) 사례

특정 2사2로 분할가능하다. 현물변의 인정하면 사실상
현물변의 인정하는 문제가 아니라 분할가능하다 /

2) 사2

1) 특정 2사2의 현물변의 인정 /

2) 단, 현물은 분할가능하다. 분할하여 그 가액 분할
강제 유치가 있는 경우 '가액배당' 가능하다 /

(2) 강제배당 분할 가부 (정정)

1) 민법 269 ② 준용

현물변의 인정받는다. 현물변의 인정시 그 가액 분할 강제
유치가 있는 경우 강제배당 가능하다

2) 특정 2사2

이 경우 다른 경우와 '가액 분할'을 인정하는 경우와
가액 배당의 인정받는다. / 2. /

II 본문(3) - 소의문1)

1 무효상한 피권구인 자

(1) 139㉔

① 위시 권과 본주는 피권구인으로 해야한다 ② 위반시
상정각하권

(2) 사오

2. 위 본주를 피권구인으로 해야한다. 위반시 상정각하
권

2 권거명위 식된 상한 권구인 자

(1) 139㉔

① 위시. 권과 본주가 권구인이야한다 ② 위반시 상
정각하권

(2) 사오

2. 위 본주가 권구인이야 한다. 위반시 상정각하권

III 본문(3) - 소의문2)

1 상정/소/소 의의/위니 (186)

위법한 상정의 권을 독점권에 하는 것이다

2 원고/상정 (186㉔)

상사자. 상사인, 상가기복원라면 원고/상정이 된다

3 공주시. 원고/상정

(1) 원고/상정



상당인에게 미치는 139조와 같은 범문의 규정이 원의
소송에서는 범문의 규정이 없이 존재한다.

(2) 조항

① 유사판무관 조항, ② 관할판무관 조항 등이 있다.

(3) 제11대

1) 제11대 - 유사판무관 조항

소유자 중 1인이 자기특수한 무리가 있거나 권리행사제한특
출판한 상태에 있는 경우 특허권, 특허권을 무효로 하는 법원의
'변제명령'으로 모아 1인이 소제기 할 수 있다.

2) 조항

① 이 경우, 소유자들끼리 상호합의할 필요성은 없다.

② 1인의 소제기로 인위적으로나 실정적인 무리가 소제기
대상자이며, 1인의 소제기가 타인들에게나 이의 패소로
다른 소유자에게 피해가 된다.

③ 무리가 해야 한다고 하면 이해관계가 다른 자에 의하여
타인의 재산권 침해되는 결과가 된다.

(4) 조항

소유자소송 제기를 변제명령으로 모아 1인의 권리행사가
된다.

(5) 소제

① 무리는 2 인으로 ② 무리조항으로 원소제기가 된다.

<참>

[문제-4]

I. 문제 (1)

1. 문제 (1)

(1) 법령과 국외 (330)

법령 위반과 국외에 들어갈 수 없는 원인이 법령과 국외
관련된다

(2) 들어갈 수 없는 원인 이면 (310)

사적 재산권인바. 사적 재산권인바. 이면가능하다

(3) 중대한 국외 (330)

법령과 국외에 들어갈 수 없는 원인이 중대한 국외
임다

(4) 사적 - 유한성 증명

사적은 법령과 국외에 들어갈 수 없는
원인 중대한 국외에 들어갈 수 없는 원인이 있다. 유한하다

2. 문제 (2)

(1) 법령과 국외

강제징역 원형 목적은 법령과 국외에 들어갈 수 없는
원인 중대한 국외에 들어갈 수 없는 원인이 있다.

(2) 사적

사적은 사적 재산권인바. 사적 재산권인바. 이면가능하다
사적 재산권인바. 사적 재산권인바. 이면가능하다

할 수 있다.

(3) 주지

- ① 특허받을 수 없는 것이 권리사항은 불가하다 (37㉔).
- ② 채무대선 특허받을 수 없는 것이 아닌 발명할 수 있다.
- ③ 가압할 수 있다.

II 실문(2)

1 특허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닌 가부 (37㉔)

사채채권인바. 아닌 가능하다.

2 이종 양로 보호

(1) 유전

사채자리 유전 양, 유효하다

(2) 예외

제2 양주인이 제1 양주인에게 양도 권능을 가진 배임행위에

각각가당하는 경우, 반사리로서 유효하여 무효다

3 출원 전 승계시, 제3자 예외요인

(1) 38㉔

출원이 제3자 대항요인이다

(2) '제3자' 의미 (4제)

제2 양주인 지위와 양립할 수 있는 발명권 과제를

가진 사채 발명권과 중재자는 아니 해결사의 양도권

※ 추가작성의 경우 []에 "계속"이라고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

계속]



(3) $\Delta \rho_2$

다른 친구도 같이 공부하자. 2학기 개강하느라 바빠

4. 兩쪽이긴 유한성

(1) 양귀야 豆卵

이러한 이유로 양측인은 간혹의 이종양로 사실을 알고 있었음
은 배임양로에 적극가담한 사실이 없이 양로계약
유효하다

(2) 兩點在直線

兩을 뜻하였을 수 있는 兩의 수제인이바 兩兩의 수제
자이고는 兩兩兩兩의 무리사유로 된다. 유로하라

20

III $L_R(3)$

영양제약 품질 상설의 경우. TMS를 2차 검토

① 羧基的引入 (330H是)

진정 빛깔과 혼수우(가) 빛깔과. 동계인만 2월의 적적의
원라

(2) 양자 계약 문제

15 X

1. X 특성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승계인 아닌 일반인이기 때문이다.
 2. X 특성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상속인 아닌 일반인이기 때문이다.

2) 4

특허 받은 후 있는 권리 양도 후 J의 의해 권리인 명의 변경 신청이 되어 등록 발생했다 (384)

한 양도 계약이 무효라 되어. J의 특허권에는 384분을 무효사유가 없다

2 甲의 권리

(1) 특허권 이전권 (99조의2)

① 384분을 위변의 경우 ^{X4의} 특허권을 수 있는 권리를 가진 甲은 법원에 특허권 이전권을 할 수 있다.

② 이 경우 실정권사부터 甲에게 특허권 등이 발생하는 것으로 본다.

(2) 광범한 배과 권한 (35)

① 384분을 위변의 무효상정 확정일로부터 30일내로 광범한 권리와 권한 가능하다. 이 경우 권한을 소급 인정한다 ② 무효상정정확일로부터 소급상정정확 가능하다

(3) 권리예외 규정 권한 (30)

J의 실정권으로 이미 권리권바 (216), 권리예외 규정 권한 해야한다.

(4) 권리인 명의 변경 신청/정구

甲2 합리가 된 경우 특허권에 신청. 甲2 합리가 권리 양도 경우 법원에 정구할 수 있다.

(5) 권리이름변환 정구 (보라)

양로대가 받았은 것이므로 못한다.

<글>

조지에게 good!

4

- 이하 여백 -

수고하셨습니다.
치과로 제기!

